

	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 2019. 7. 12(금) 총 8매(본문7, 참고1)		
담당 부서 도시경제과	담당 자 • 과장 배성호, 서기관 정재원, 주무관 김은경 • ☎ (044) 201-4845, 4097, 4879			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1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14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.

혁신 생태계 조성·해외진출 역점 「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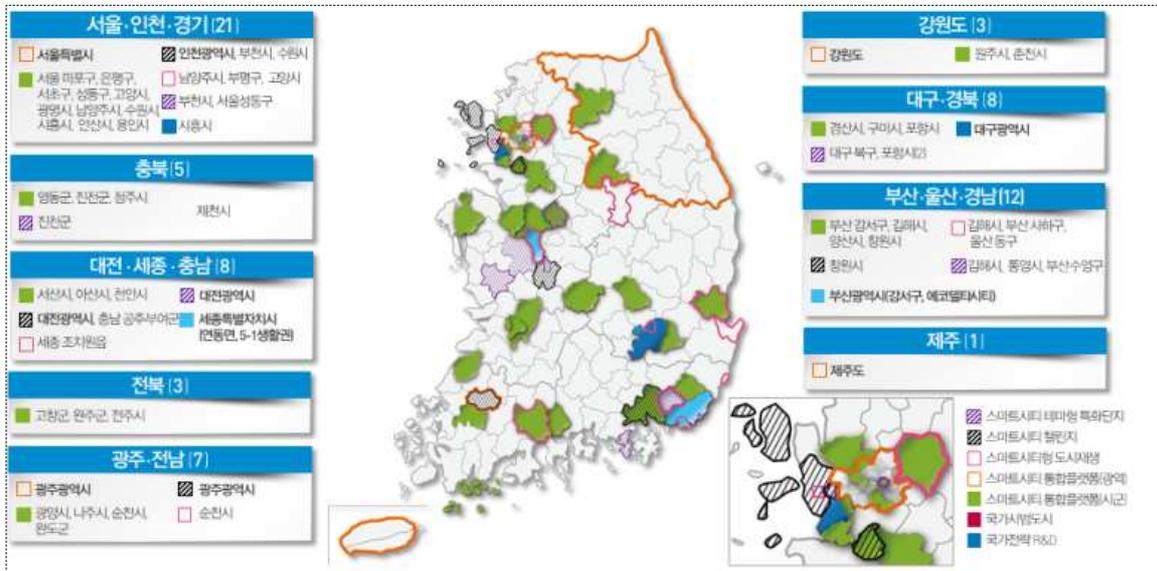
- ◆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 제시
- ①공간·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, ②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, ③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 목표
 - 비전과 3대 목표달성을 위해 4개 분야, 14개 세부과제 마련
- ① (맞춤형 조성) 도시 성장 단계별(신규-기존-노후) 맞춤형 스마트 시티 모델 조성을 지속하고,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도 확대 개편
 - 특화 도시(대) / 단지(중) / 솔루션(소) 사업 구분, 규모·개수 차별화
 - ② (확산 기반)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, 데이터·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·실증, 인재육성 병행
 - 홈페이지 구축,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정보축적 및 홍보
 - ③ (혁신 생태계) 과감한 규제개선, 기업·시민 참여 거버넌스, 창업 지원, 수요-공급 매칭 등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활성화
 - ④ (글로벌 협력·진출) 민간 해외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방안* 추진, G2G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,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출범
- * 금융 지원, 네트워크 구축,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,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7월 15일,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,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,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망라한 「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(’19~’23)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계획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스마트도시법)」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, ’18.1월에 발표한 「스마트시티 추진전략」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.

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

-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해왔고,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와 함께 주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왔다.
- 먼저,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*되는 가운데, 2차례의 「스마트도시법」 개정(’18.7, ’19.4)으로 관련 규제개선**를 대폭 개선했다.
 - * 국토부 스마트시티 예산 추이(억원) : (’17) 49.8 → (’18) 142.6 → (’19) 703.6
 - ** (국가 시범도시) 신산업 육성 9개 특례 마련 +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 등 (기존도시) 사업 면적제한(30만㎡ 이상) 폐지, 자가망 연계 확대, 진입규제 완화
- 또한,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 - 전국 78개 지자체(광역 17개 시·도 전체 + 기초 61개, ’19.6)가 스마트도시 과·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
 - *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: ’14년 10개 → ’18년 34개 → ’19.6월 78개
 -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 곳으로 집계되었다.
 - * 국가 시범도시(2곳), 혁신성장동력 R&D 실증(2곳), 스마트시티 챌린지(6곳), 테마형 특화단지(8곳), 통합플랫폼 보급(37곳),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(12곳)

《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 》



- 다만, 정부는 그간 조직정비, 예산확대, 규제개선,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하였으나,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 이자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.
 - 이에, 이번에 수립된 「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」에서는 기존에 추진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아냈다.
- ‘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, 스마트시티’를 비전으로 수립된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.

추진전략 및 세부과제

- 첫째, 지난해 1월 「스마트시티 추진전략」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(신규-기존-노후)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을 이어나간다.
 - 먼저 4차산업혁명 신기술·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(세종 5-1, 부산 EDC)는 공간계획·설계를 완료하고,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(H/W)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(교통·에너지·안전·헬스케어 등) 콘텐츠 개발(S/W)을 본격 추진한다.

- 이와 함께,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.

- 또한, 기존도시 대상 시민 체감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확산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,



-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, **특화도시(대) - 단지(중) - 솔루션(소)**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.

- 확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민간제안 사업(기존 챌린지 사업) 추진시 대·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여, **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**를 조성해나간다.

-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-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'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'을 '22년까지 25곳 이상'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나간다.

* 뉴딜사업 중 현재까지 12곳을 선정하였으며, 7곳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(5곳은 수립 중에 있음)

- 둘째,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**통합플랫폼 조기 보급**을 추진하고, 데이터·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·실증,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.

- 먼저,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·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'22년까지 108개 지자체, 이후 전국단위 보급'을 추진하고, **광역센터(17개 시·도)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**도 병행한다.

《 통합플랫폼 구축효과 예시(대전시 사례) 》

○ 대전시는 통합플랫폼 실증도시로 선정('16.4)되어, 지자체와 112·119·재난망 등을 연계한 5대 연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

⇒ 112는 범죄율 감소(6.2%), 검거율 증가(2.7%), 119는 출동시간 단축(7:26초 → 5:58초), 7분내 출동 증가(63.1→78.5%) 등 성과('18.8)

* 사회적 약자 보호(142건), 긴급 재난상황(438건) 등 총 15,117건 지원('18년)

○ 또한 데이터·인공지능(AI) 기반 도시운영(데이터 허브 구축)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(R&D) 실증사업*(대구·시흥)을 추진하되,

* 국토부·과기정통부 공동 1,287억원 / '18~'22년 / 76개 연구기관 참여 중

- 금년까지 1단계 기술개발,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 서비스 개발**, '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** (대구) 교통, 안전, 도시행정, (시흥) 환경, 에너지, 생활복지

○ 아울러,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(교육인원 누계 1,800명)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,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시민·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 포털(www.smartcity.go.kr) 구축('19.12)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다큐멘터리 제작('19.9 방영)도 함께 추진한다.

③ 셋째,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 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.

○ 먼저, 스마트시티 내 기술·서비스의 융·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·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.

- 이와 함께,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**일괄적으로 해소**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'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(규제 유예제도)'를 도입하는 한편,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*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.

*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('19년 56억)은 7.10(수)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

-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.

- 특히,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된 '융합 얼라이언스'를 지속 확대*하고,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 한다.

* 대·중소기업 및 벤처·스타트업 113개 기업 발족 → '19.6월 기준 395개 기업 참여중

- 또한 테마형 특화단지, 챌린지, 연구과제(R&D)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한편,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'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'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.

- 이 외에도,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연구과제(R&D)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

- 중기부 협업으로 연 100개 내외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, 혁신 서비스 구축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, 수요-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 운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.

④ 넷째,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.

- 최근, 정부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(연 18.4% 성장 전망, Market&Markets)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「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(7.8)한 바 있으며,

- 이에 따라, 금융지원, 네트워크 구축, 대·중소 동반진출,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-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*에 대응, 주요국 업무협약(MOU) 체결**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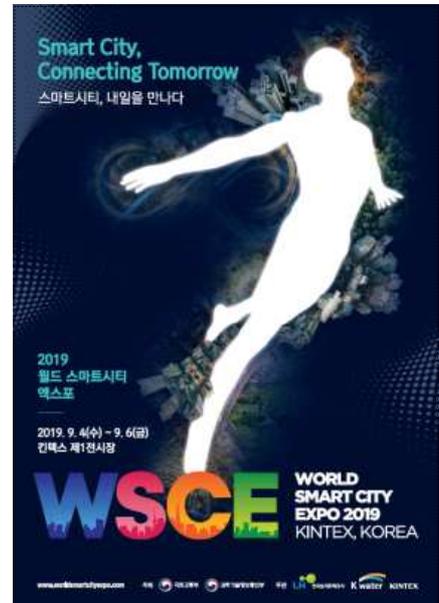
* 개도국(아세안, 중남미 등) 및 선진국(유럽, 미국) 등에서 기술협력 등 수요 급증

** MOU 체결('18~'19) : 페루('18.3), 오만('18.7), 중국('18.8), 말레이시아('19.3), 네덜란드('19.7)

-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.

- 기존 두 차례('17~'18) 개최된 「월드 스마트 시티 워크」 행사를 「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」로 새롭게 개편하면서,

-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.



-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“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.”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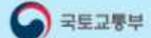
- “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,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정재원 서기관, 김은경 주무관(☎ 044-201-4097, 48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('19~'23)

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, **스마트시티**
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

SMART CITY

전략 01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.



국가 시범도시

- 4차산업혁명기술 집약(세종·부산)
- '21년말 최초 입주 목표(부산)
- 범부처 R&D 연계·실증 확대

기존 도시

- 교통·환경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
- 1000여개 단지와 1000여개 솔루션 단위로 재편
-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포용도시 조성

노후 도시

- 저비용·고효율 스마트솔루션 적용
-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('22년까지 25곳 이상 조성)

전략 02 스마트시티 확산기반을 강화합니다.



통합플랫폼

- 복지·환경 등 서비스 확대
- 기초지자체 연계 광역센터(시·도) 구축



연구 개발

- '18-'22, 1,287억원 /
- 데이터·AI 기반 플랫폼 개발
- 핵심 스마트서비스 실증(대구·시흥)



인재 육성

- 향후 5년간 450명 교육
- 석·박사 스마트시티 과정 운영



시민 소통

- 정보포털 구축, 뉴스레터 발간 (www.smartcity.go.kr)
- 스마트시티 다큐멘터리 제작

전략 0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.



규제 개선

-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
-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 실증 지원

거버넌스

- 라방랩, 기업 얼라이언스 등 활성화
- 지자체 협의회, 범정부 추진위 운영

표준화·인증제

- 세계시장 선점 목표 국제표준화 추진
- 스마트 도시·서비스 인증제 추진

산업기반 구축

- 100여개 청년창업 지원(중기부 협업)
- 스마트시티 온라인 솔루션마켓 구축

전략 04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.



해외진출 지원

- PIS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강화
- 대·중소기업 등 동반진출 지원



교류협력 강화

- 해외 MOU, 시범사업 등 협력
- 국제 포럼 등 정책·기술 교류



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

-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
- 해외 협력(G2G) 및 비즈니스(B2B) 지원